

# ‘제주형 재난지원금’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

### 도, 접수 시스템 개선...오늘부터 현장접수

### 읍면동 창구에서 사전 심사 진행 후 신청

제주도가 27일부터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접수 시작을 앞두고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했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 온라인 접수 진행상황 및 현장접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을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7일부터는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읍면동 창구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행복드림포털에 수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제주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행정정보

공동이용병행심사를 통해 27일부터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 접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또한 읍면동주민센터 현장접수와 함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읍면동을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각 행정사에서 주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매주 그 결과를 도에 전달함으로써 지급 대상에 누락된 세대에 대한 추가지출에도 힘을 쏟는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한다. 제주도는 주민센터 업무량과 방역환경을 고려해 각 마을사무소를 통해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한다. 또 예비비를 투입해 행정장비를 임차하고 지원TF·이의신청 처리 심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담 인력에 대한 조지를 재정비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심사는) 부처격을 걸러내는 철저한 심사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고려해서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의 신청 과정에서 이중으로 서러운 점과 억울한 점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국난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고의가 아니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

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며, 원활한 접수처리를 위해 다음달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토요일 제외)가 적용된다. 법정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4월30일)과 어린이날(다음달 5일)에는 ‘5부제’가 다음날 적용된다. 다음달 9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



제주도청 별관 3층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 마련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에서 관계자들이 지원금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24일까지 지급결정이 완료된 세대는 3만7139세대며, 지원금

은 127억360만원이다.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 대응팀으로 하면 된다.

오유나 기자

## ‘서울 농부’ 기계 구입비 600만원 지원...고령농가에 일손 더한다

### 다음달 4일 부터 지역농협 통해 신청

서울지역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구입하면 서울시와 농협이 농가당 최대 600만원의 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덜고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농협 서울 지역본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여대의 농업기계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 소재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이다. 1농가 당 1기종(부속기포함)에 한해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며 지

원금을 초과하는 기종을 구입할 경우 차액은 신청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5월4일~29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관내 거주이력, 영농경력,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한다. 신청은 농업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해 농기소제지 지역농협(본점) 또는 소속지역조합에 하면 된다.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보조금 혜택을 받은 농가는 3년 동안 심

사에서 제외된다.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6월 중순경 개별 지원자에게 통보된다. 선정된 지원자는 농업기계를 구매 또는 인수한 후, 지역농협(본점)으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시에는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대엽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서울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와 협력해 사업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일손을 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농가에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뮤지션들의 제작 활동 지원 나서

부산시는 다음달 15일 오후5시까지 2020년 부산음악창작소 음반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뮤지션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정규, 미니, 컴필레이션의 3개 분야에 걸쳐 총 7팀을 선발, 6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뮤지션의 음원 제작, 프로듀싱, 뮤직비디오 제작, 유통, 쇼케이스 개최, 홍보마케팅 등의 후속 활동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한다. 정규음반 부문(2팀)은 음반 발매 경력이 있는 부산 뮤지션을 대상으로 음원 8곡 제작(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미니음반 부문(3팀)은 음원 5곡 제작(최대 1000만원)을, 또한 컴필레이션 음반 부문(2팀)은 3팀 이상의 뮤지션으로 구성된 연합팀을 대상으로 음원 5곡 제작(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부산음악창작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뮤지션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음악활동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음악창작소 또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태 기자

## 부산 남구 ‘워킹스루 부스’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부산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마련된 ‘다목적 음압·양압 검체 채취 부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통해 지방 혁신행정을 선도하고 위기 대응능력을 높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요인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제고, 고용창출 등을

선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338건 가운데 5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이동형 음압채담 부스·양방향 도보이동형 부스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부산 남구보건소) △공공배달업 개발·보급(전북 군산) △리프트 등 개인이동수단의 버스 반입 허용(세종)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경기 광주) △네일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대전 유성)이다. 특히 부산 남구보건소는 코로나19 선외검사 시 검사자가 양압 부스 안에 들어가 검사를 진행해 검사 속도를 높이는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를 제작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 블로그·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확산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더 좋은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인천시, 아빠육아천사단 모집 나선다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간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인천지역 육아휴직 현황(2020년 3월25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총 육아휴직자 수는 2015년 2473명, 2016년 2515명, 2017년 2565명, 2018년 2954명, 2019년 3498명이다.

이 중 남성 육아 휴직자 수는 2015년 117명(4.7%), 2016년 181명(7.2%), 2017년 228명(8.9%), 2018년 411명(13.9%), 2019년 708명(20.2%)이다. 특히 전년 대비 총 육아휴직자 수 상승폭은 18.41%로 소폭 상승했으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2.26%로 크게 올랐다.



## 서울 금천구, ‘KF94 마스크’ 12만매 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외국인 단체에 전달

서울 금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외국인 단체에게 마스크 총 12만731매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각 동의 통·반장에게 협조를 구해 27일부터 찾아가는 배부방식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4만 2371명에게 1인당 KF94 마스크 3매씩을 순차적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또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역 외국인단체 2개소에 KF94 마스크 100매씩을 지원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인 해 느슨해진 경각심을 재강조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김기태 기자

## 전북교육청, 방과후 강사에 선금 지급 결정...전국서 처음

### 신청자에 100만원 지급

전라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선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과후 교사들은 ‘협의가 진행 중에’라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청은 방과후 강사들이 원할 경우, 계약금액의 20% 또는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선금 지급 결정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수개월째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나 교육지원청과 직접 계약한 강사는 7000여명이다. 하지만 개학 연기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강



사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태 기자